

(3) 「교토 氣候變化協約」 總會의 波長

○(焦點)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개도국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가 주요 사안으로 등장
 ○(對應) 선진국 수준의 CO₂배출 감축과 에너지/탄소세 부과는 수송, 주택, 그리고 우리나라 기간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및 효율 향상 노력이 요구됨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규제 대상국 설정 예정이나 국가간 많은 논란이 예상됨

- 12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협약안이 채택될 예정이나, 감축 규모의 설정이나 개도국 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됨
- (現況) 96년 제네바에서의 2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CO₂ 등 온실 가스 배출 삭감 목표와 규제 대상 국가군이 설정될 예정임
 - 이 협약은 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고 94년부터 발효되었는데, 선진국과 동유럽 국가의 200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
 - 협약 의무의 강화와 감축 수단을 구체화하는 ‘의정서’ 채택을 위해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가 지난 95년에 베를린, 96년에는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음
- (國家別 動向) 선진국들의 ‘共同責任論’¹⁾ 개도국들의 ‘累積責任論’²⁾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감축 목표의 완화 내지는 협상의 결렬도 예상되고 있음
 - 천연가스 사용 시스템을 갖춘 EU는 선진국의 CO₂ 배출량을 2010년까지 90년의 85% 수준으로 줄이고 선진 개도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임
 - 세계 에너지 소비와 CO₂ 배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2년까지는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17년까지 5% 감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개도국의 공동 참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1)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적 현상이고 개도국들의 온실 가스 배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배출량 감축 의무가 있다는 입장
 2)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낭용하고 온실 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해온 선진국들이므로 이들이 배출량 감축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개도국에 대한 배출 절감 기술 이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은 201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90년 대비 5% 감축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절감량 설정에 신축성이 부여함에 따라 실제로는 3% 수준의 감축안 제시
- 개도국들은 형평성과 경제 성장 억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임

에너지 소비
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우리 나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제 위축 예상

- CO₂ 배출량 세계 11위이고 OECD에 새로 가입한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경제 위축이 우려됨
- (現況) 우리나라 CO₂ 배출량은 90년 이후 매년 10%라는 세계 1위의 증가율을 기록, 95년에는 1억1천5백만TC(탄소 환산톤)에 이르렀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2억TC에 이를 것임
 - 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85~95년 동안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10.3%로 일본의 3배, OECD 회원국 평균치의 7배임
 - 88%에 달하는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도 주된 요인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를 훨씬 넘어서고 있음

<우리 나라 CO₂ 배출 관련 지표>

	1973	1990	2000	2010
CO ₂ 배출량(백만 TC)	18.9	65.2	148.5	217.0
일인당 CO ₂ 배출량(TC)	0.56	1.52	3.17	4.37
에너지 수요(백만 TOE)	25.0	93.2	210.4	328.1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 (影響) 배출량 규제에 있어서 가장 온건한 입장인 미국의 기준이 적용된다 해도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은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임
- 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간 산업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해당 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산출 감소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GNP 감소를 유발

환경 외교의
강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환경
산업 투자 확
대 도모

- 환경 외교 강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
는 한편 장기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향상에 주력
- (政府) 우리 나라 CO₂ 배출량은 세계의 1.1%에 불과하고 경
제 성장과 산업 구조상 대규모 배출 감축이 불가능한 만큼
개도국과의 협조를 통해 타당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그 이후에는 전략 업종의 에너지 절약과 CO₂배출 절감을 위
한 설비 투자상의 세제·금융 지원과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필요. 장기적으로는 규제 강화가 확
실한 만큼 에너지 저소비, 환경친화형 경제로의 전환 추구
 - (企業) CO₂감축을 위한 에너지 투입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대체,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적 대외 투자를 통해 상하부 공정의 분리 진출도 모색해야
할 것임. 환경산업은 환경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
고 있고 우리 나라 기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이 산
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박 병 철)